

회 의 록

과 제 명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신동화	회의일시	2013. 8. 16.
내부참석자명단	이철호, 이숙종, 이꽃임				
외부참석자명단 (※다수일 경우 별도첨부)	성명	신동화	소속	한국식품안전협회	
	성명	김민규	소속	CJ 식품안전센터	
	성명	김창민	소속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성명	김정선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명	박경진	소속	군산대학교	
	성명	문은숙	소속	식품안전정보원	
	성명	오덕환	소속	강원대학교	
	성명	이정근	소속	농심 식품안전센터	
	성명	전향숙	소속	중앙대학교	
	성명	유순영	소속	한국식품안전협회	
	성명	이민석	소속	한국식품안전협회	
	성명	정윤희	소속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용	<p>제4회 식량안보 간담회는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국식품안전협회 신동화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박사, 중앙대학교 전향숙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로 진행되었다. 위 과제는 식량안보연구재단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중간 점검 발표 겸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p> <p>먼저 신동화 교수는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어서 김정선 박사는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라는 제목으로, 전향숙 박사는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주제로 신동화 교수 연구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발표했다.</p> <p>세 분의 주제 발표 후, 각계 전문가 12분을 모시고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합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소비자보호원 정윤희 - 식품안전관리의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견해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식품관련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이유도 관리가 부족하다거나 안전성에 문제 보다는 새로운</p>				

	<p>유해물질들이 발견되고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식품안전관리는 이슈물질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품에 대해 지속관리가 필요하다 -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한다는 업계나 학계의 의견과 달리 소비자들은 과학적 사실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요구 수준이 안전성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식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식중독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가공식품보다는 음식점에서 발생건수가 훨씬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현재 음식점 관리는 영업자격증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지 정도만 보기 때문에 중앙·지방관리 전문가 필요. 보완이 필요하다. -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선진국의 사례에서 일본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따라서 소비자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고 유럽의 시스템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 - 식품안전처 2원화 문제(의약처, 식약처)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보고서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p>(2) 매일유업 중앙연구소장 김창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검사항목 중 오래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검사항목 및 법규 등은 수정 할 필요가 있다 - 생략할 검사항목들을 어떻게 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업체별로 자료를 만들고 협회가 취합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근거 확보를 위해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동안의 검사실적을 중 부적합 판정이 없는 검사항목들을 먼저 제거항목으로 거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정윤희) <p>(3) CJ 김민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교역이 활발한 한/중/일/미에 대해 수출수입 시에 기준규격이 다른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위해물질이나 risk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해외의 정보를 기업에 알려주는 제도 및 교육이 필요하며 이런 조치들이 식품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부는 해외에서 이슈가 된 사항들을 먼저 기업과 연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역할 강조 <p>(4) 농심 이정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들이 국내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지나치게 저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risk communication 강조) -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기업에서 R&D 비용에 비해 불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가 있으므로 올바른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된 맛가루 사건을 예로 들면 이제 위해성 뿐 아니라 건전성도 요구되는 상황인데 건전성에 대한 기준설정이 사실 어렵고 모호하다. 분말식품 200개정도 건전성을 보겠다는데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
--	--

	<p>(5) 식품안전정보원 문은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개선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 있다 - 현재 식품안전통합지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 중이다. 식품안전관리를 체감하는 것과 관리 체계의 gap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 식품안전처로 바뀌면서 행정학자들을 불러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주로 식품안전관리 structure만 논의하다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 (소비자관련, 산업계 communication)가 빠졌다 <p>(6) 군산대학교 박경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개인적인 통제가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식중독은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식품안전위해요인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어떻게 예방이 가능한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적다고 본다 - 그러나 화학적 위해나 방사능 오염과 같이 소비자들이 스스로 통제와 예방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 위험정도별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시한다면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isk Analysis를 전 세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나리오” 등 방법론 개발 필요하다 <p>(7) 강원대학교 오덕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과제의 핵심적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유사한 보고서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핵심차별화가 필요하다. - 식약청이었을 때와 현재 식약처일 때 관리방안이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활용 가능한 action plan을 제시하면 좋겠다. - 외국의 사례들을 단순히 비교하는데 그치지 말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 축산물의 경우 HACCP로 관리방안이 통합되어 있어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한데 농산물은 GMP, HACCP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럽처럼 통합할 필요 있다
<p>회의장소</p>	<p>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412호 세미나실 오전 10시~12시 30분</p>